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북아통상과 이은호 과장(02-2110-5287), 김덕구 사무관(02-2110-5286)

최경림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점검회의 개최
- '13년 상반기 중국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7.17일(수) 중국경제 전문가 및 주요 업종별단체와 함께 **중국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는 '13년 상반기 중국 경제상황 점검 및 우리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

< 중국 경제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3.7.17(수) 08:00~10:00 / 팔래스호텔

◇ 참석자 :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전문가, 업종별 단체 등 약 20명

* KIET, KIEP, KOTRA, 무역협회, 국제금융센터, 금융연구원, 수출입은행, 업종별단체 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산업생산 및 투자의 동반부진에 따른 것**으로 수출입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나 **경착륙 및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 중국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보다는 작년 수준인 **7.7%**('13년 성장률 목표치 7.5%) **수준의 중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붙임2 참고)**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한국의 **대중수출 둔화리스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가공무역중심에서 소비재중심으로의 수출구조 전환, 중국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재·부품 공급확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중서부 지역 공략 등의 추진 필요성을 제안

○ 아울러, 시장의 심리불안이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중국경제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안

□ **최경림 차관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 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평가하며,

○ 중국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대중국 통상·협력 전략도 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방중 후속사업 및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밝힌 대중국 수출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단체에는 업종별 중국 정책변화 모니터링 및 기업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

□ 아울러, 최 차관보는 우리의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고, 한중 FTA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 중국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경제 점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한중 FTA 협상 등에 참고**할 계획임을 밝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김덕구사무관(☎ 02-2110-52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중국경제 점검회의 참석자 명단

순번	소속	직급	성명
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최경림
2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이은호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팀장	양평섭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부연구위원	문익준
5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지원장	이문형
6	KOTRA 중국사업단	단장	박한진
7	KOTRA 중국사업단	차장	장상해
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정환우
9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지만수
10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부장	이치훈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주영
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추장민
13	포스코연구소 글로벌경제정보센터	수석연구위원	사동철
14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조용찬
15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유호림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북아협력팀	선임 연구위원	홍성범
17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변웅재
18	유미무역	대표이사	이용무
19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팀장	안수훈
20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본부	본부장	안기현
21	한국석유화학협회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조형일
2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팀장	김부흥
2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센터장	우성제

붙임2 중국경제의 현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배경

□ '13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7.5%로 3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위험성이 제기

* ('12년 4/4분기) 7.9% → ('13년 1/4분기) 7.7% → ('13년 2/4분기) 7.5%

○ 경기 회복세가 계속 지연되면서 '13년 정부의 목표치인 7.5%을 하회할 우려가 커지면서 경착륙 위험성 확산

□ 6월의 신용경색 충격이 단기 금리 급등과 증시 폭락으로 전이되면서 일부에서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

○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5월부터 유동성 축소에 나서자 은행간 대출금리가 급등

* 상하이 은행간 대출금리 Shibor(1일물) : (6월 18일) 5.59% → (6월 20일) 13.44%

○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충격이 주식시장으로 전이되면서 6월 24일 상하이 종합지수가 5.3% 폭락하면서 2000선 이하로 하락

□ 중국의 경기둔화나 신용경색 충격이 경착륙이나 중국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이에 중국의 경기둔화와 신용경색 충격의 원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이후 발생한 위기 가능성을 분석

○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경착륙할 경우, 금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

* 주요국 수출비중('12년) : 중국(24.5%), 미국(10.7%), EU(9.0%), 일본(7.1%)

2. 동향

1) 중국의 경기 둔화

□ '13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7.5%('13년 상반기 7.6%)를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 위험성이 제기

○ 전체적으로 실물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당분간 경기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중국은 '12년에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3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00~'11년의 평균 경제성장률 : 10.2%

<표 1>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전체	1/4	2/4	上
GDP	8.1	7.6	7.4	7.9	7.8	7.7	7.5	7.6
산업생산	11.6	9.5	9.1	10.0	10.0	9.5	9.1	9.3
소매판매	14.8	13.9	13.5	14.9	14.3	12.4	13.0	12.7
고정투자	20.9	20.4	20.5	20.6	20.6	20.9	20.1	20.1
수 출	8.8	10.4	4.5	9.5	7.9	18.9	4.2	10.4
수 입	10.0	6.4	1.5	2.8	4.3	9.2	5.3	6.7
CPI	3.8	2.9	1.9	2.1	2.6	2.4	2.4	2.4
M2	13.4	13.6	14.8	13.8	13.8	*15.7*	14.0	14.0

□ 주요 원인은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생산 및 투자 부진 등의 경기 요인과 반부패정책, 경제개혁 추구 등의 정책요인

○ (경기요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유럽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대외환경 불안으로 생산, 투자 부진

○ (정책요인)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제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

<표 2> 중국의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1Q	2Q	3Q	4Q		1Q	2Q
순수출	3.9	-4.2	-8.7	-11.6	-5.5	-2.2	-2.2	14.2	0.9
투자	52.9	47.7	30	51.2	50.5	50.4	50.4	30.3	53.9
내수	43.1	56.5	78.7	60.4	55	51.8	51.8	55.5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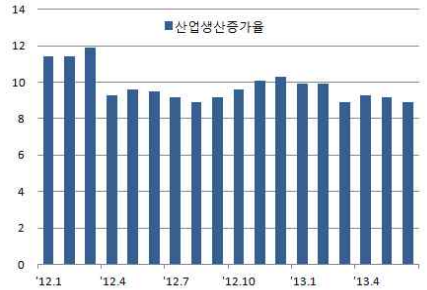
□ (산업생산)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회복세가 지연

○ '13년 상반기 9.3%로 '12년의 10.0%에 비해 완만한 둔화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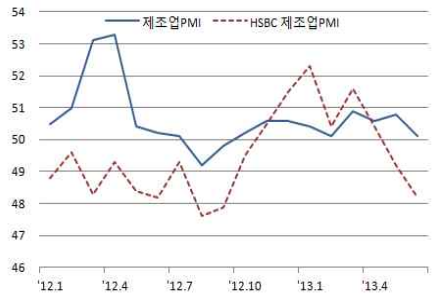
* 산업생산증가율 : (1-3월) 9.5% → (4월) 9.3% → (5월) 9.2% → (6월) 8.9%

○ 6월 제조업 PMI지수는 50.1로 9개월 연속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나 HSBC 제조업 PMI는 48.3로 9개월이래 최저치

<그림 1> 산업생산증가율



<그림 2> 제조업 PMI지수



□ (투자)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었으나, '12년의 20.6%보다 둔화

○ 기초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계, 열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진

* 1~6월 고정자산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20.1%

□ (소비) 연초에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4월부터 점차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12년의 14.3%보다는 둔화

○ '13년초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정책으로 인한 정부소비의 감소가 민간소비에도 부정적 영향

* 소매판매증가율 : (1-3월) 12.4% → (4월) 12.8% → (5월) 12.9% → (6월) 13.3%

□ (수출) 호조를 보이던 수출은 5,6월에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

○ '13년 1~4월에 크게 상승한 수출증가율은 5,6월에 들어 외자유입 규제조치와 위안화 절상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

* 수출증가율 : (4월) 14.7% → (5월) 1.0% → (6월) -3.1%
* 수입증가율 : (4월) 16.8% → (5월) -0.3% → (6월) -0.7%

○ 상반기 지역별 수출은 대만(27.4%), 아세안(22.58), 홍콩(42.7%) 등이 증가하였고, 선진국인 EU(-3.9%), 일본(-3.8%), 미국(1.8%)은 부진

- 특히, 대홍콩 수출통계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핫머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5,6월에는 증가폭이 크게 감소

* 대홍콩 수출증가율 : (3월) 92.9% → (4월) 57.1% → (5월) 7.7% → (6월) -6.9%

□ (물가) 식품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세

○ '12년 2.6%를 보이던 CPI(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6월에도 2.7%를 기록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 3.5%를 하회

○ 상반기 CPI는 채소(2.3%), 돼지고기(-3.7%) 등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식품물가가 안정되면서 2.4%를 기록

2) 중국의 신용경색 충격

□ 6월의 신용경색현상이 단기 금리 급등과 증시 폭락으로 전이되면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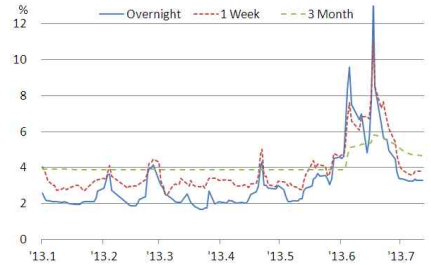
○ 6월 20일 1일물 콜금리가 13.4440%(578.40bp↑)까지 오르고, 7일물 콜금리도 11.0040%(292.90bp↑)까지 상승

* 20일 인민은행이 '그림자금융'으로의 자금 유출 억제를 위해 시중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

○ 6월 24일 상하이 종합지수가 5.3% 폭락하면서 2000선 이하로 하락하고 '09년 8월 31일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

* 상하이 종합지수 : (5월 27일) 2283.077 → (6월 24일) 1963.235
* 선전 종합지수 : (5월 27일) 1037.194 → (6월 24일) 881.869
* 6월 24일 : 상하이 지수(-5.3%), 선전 지수(-6.7%)

<그림 3> 중국 SHIBOR Rate



<그림 4>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



□ (정책요인) 중국인민은행이 과잉 유동성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단기자금 경색 현상 발생

○ 시중의 과잉 유동성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가로 인해 유동성을 축소하는 조치가 필요

* 5월말 중국의 총통화(M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5.8%, 1-4월 중 사회총융자규모는 7.91조 위안으로 전년동기(3.06조 위안)대비 63.1% 증가
* 1-4월 중국금융기관의 신규대출액이 3조 5,42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3조 1,406억 위안) 대비 12.8% 증가

○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중국 증시의 급등, 주택가격의 상승등과 같은 자산버블 현상이 발생

* 5월 중 70개 도시 신규분양주택(보장성 주택 제외)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한 도시가 69개, 하락한 도시는 1개에 불과
* 광저우(15.5%), 베이징(15.2%), 선전(14.0%) 각각 급등

○ 중국인민은행이 5월부터 시장의 유동성 통제를 실시하면서 중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문제 발생

* 5월 사회총융자규모가 1.19조 위안으로 4월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위안화 신규대출규모도 6,674억 위안(시장예측치 9,000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16.2% 축소

□ (구조적 요인) 은행들의 자금에 대한 투기적 수요와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우는 비은행권 대출로 인한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

○ 상당수 은행들이 대부분 단기로 자금을 융통해서 장기에 투자하는 구조

○ 자금시장의 왜곡된 구조로 인해 비은행권 대출인 그림자 금융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다른 대출금리가 상승되는 현상

○ 금융위기 직후의 막대한 통화량 공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금이 국유기업으로 몰리는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구조적인 과잉유동성 문제 발생

* 최근 5년간('08~'12년) 중국의 연평균 총통화 증가율은 18.7%로 인도(13.8%), 멕시코(10.6%) 등 주요 신흥국보다 높은 수준

3. 평가 및 전망

1) 경착륙 가능성 및 금융위기 가능성

□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나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경착륙 판단지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 GDP 성장률 7% 미만, 성장률 하락폭 2%p이상으로 정의

○ 현재의 경기 침체는 성장방식 전환과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서서히 연착륙될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과 국무원의 전망에 따르면, '16년에 성장률이 7%대로 하락하고 '23년에는 5%대의 성장률로 진입

○ 단기 금리 급증과 증시 폭락에 미치는 신용경색 충격이 기업의 자금난 등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

* 중국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등의 금융 리스크는 현재 중국 당국의 통제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과잉 유동성의 해소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

* 국무원은 6월 19일, 상무회의에서 경제모델 전환 및 금융재원의 분배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

□ '13년에는 현재의 둔화기조가 유지되면서 작년과 비슷한 7.7%의 경제성장 예상

○ 경기회복세의 둔화와 반부패법 강화로 인해 2013년에도 소비보다는 기초 인프라 등의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 정부의 목표치인 7.5%이상은 달성할 전망

○ 현재의 경기둔화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정부는 불가피한 성장둔화를 어느 정도 감수

□ 새로운 지도부의 통치이념이나 경제정책 방향은 '13년 가을에 열리는 18기 3중전회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전망

* (장쩌민,1993년) 경제개혁의 청사진 → (후진타오,2003년) 과학적 발전관

○ 시진핑 주석이 양회에서 강조된 중국몽('중국의 꿈')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개념으로 통치이념이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재정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기조에 따라 신형 도시화와 관련된 기초 인프라 위주의 투자확대정책 등을 전망

○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3년 국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12조 7,630억 위안, 13조 9,630억 위안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1조 2,000억 위안으로 2012년(8,000억 위안) 대비 50% 증가

○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신형도시화 정책에 따라서 기초 인프라의 투자확대는 계속되고,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출도 계속 확대

○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계획된 재정확대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단기 경기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전망

○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모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지속가능한 성장보다는 위험요소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히고, 현재 희생이 불가피함을 강조

□ (통화정책)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기조에 따라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운용할 전망

○ 6월 24일 발표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그 동안의 '안정적 통화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 상반기 CPI 상승률이 2.4%인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동산 가격 안정 필요성, 물가상승 압력,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구조 조정 등으로 추가적인 완화정책은 쉽지 않을 전망

○ 그러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올해 목표치인 7.5%보다 낮아지거나 대외적인 충격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고려할 전망

3) 중국의 2013년 개혁방안

□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민생개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및 구조조정, 세제· 호적제도를 비롯한 제도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최근의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위한 경제개혁에 집중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5월 18일 '2013년 경제체제개혁 중점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국무원 20호)에서 2013년 경제체제 7대 개혁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

○ 7대 개혁 분야로는 행정체제 개혁, 재정 및 세제개혁, 금융체제 개혁, 투자 및 융자 개혁, 자원가격 개혁, 민생제도 개혁, 도시화 추진계획과 도시와 농촌의 통합관리에 관한 개혁 등이 포함

○ 7대 분야에 걸쳐 총 22개 세부내용이 제시되었으며, 각 세부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관련부서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관련된 유관부서에서 개혁에 관한 세부계획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 1) 국유기업개혁 2) 개방형 체제개혁 3) 교육·문화·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혁 4) 혁신체제 개혁 5) 수입분배제도 개혁 등에 대해서도 개혁을 계속 추진

<표 3> 2013년 경제체제 개혁의 7대 중점업무

	중점업무	주요 세부 내용
1	행정체제 개혁	– 정부조직개혁 심화 – 심사절차 간소화 – 정부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
2	재정 및 세제개혁	– 정부 예산제도 개선 –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지역 확대 – 자원세 개혁(석탄 등 과세품목 확대) – 국유기업 개혁(예산 및 수입분배구조)
3	금융체제 개혁	–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의 안정적 추진 – 장외 주식시장의 업무규칙 시스템을 확립하고 중소기업 양도시스템 시범 지역 범위 확대, 중소투자자 권리보호체계 확립, 석탄·철광석·원유 등 상품선물과 국채선물시장 구축 추진 – 예금보호제도 추진
4	투자 및 융자 개혁	–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금융·에너지·철도·통신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진출 장려 – 철도와 관련된 투자 및 융자 시스템 개혁
5	자원가격 개혁	– 전기세 개혁추진, 전국적인 석탄 거래시장 확립, 천연가스 가격 개혁 추진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기세·수도세·천연가스등의 차별적인 가격제도 확립
6	민생제도 개혁	– 도시와 농촌의 중대 질병 보험체계를 확립하고 점진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호체계를 구축 – 엄격한 생산, 유통, 소비의 식품안전 감독관리체계 구축 – 엄격한 환경보호 관리감독체계와 생태보상제도를 건립
7	도시화 추진계획과 도시와 농촌의 통합관리에 관한 개혁	– 도시화 발전계획을 연구 – 도시의 종합적인 수용능력과 인구이동 상황에 근거하여 호적제도개혁 추진 – 토지관리제도의 안정을 추진하고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개혁을 추진 – 농촌의 생산관리, 등기 제도등을 확립

자료 : '2013년 경제체제개혁 중점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에서 재정리

4. 시사점

□ (단기) 경착륙이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

○ '13년 대중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점차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판, 내수용 중간재(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의 대중 수출에 큰 영향

○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교역구조는 중국의 대세계 수출감소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내수시장용 수출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 필요

* 對中 가공무역 비중('10년, %): 대만(60.6), 韓(51.4), 日(34.9), 美(20.8), 獨(9.0)

□ (중장기) 새로운 시진핑 지도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집중

* 리커창 총리는 주룽지 총리시절의 강력한 경제개혁을 실시할 전망

○ 중국경제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예상보다 빠른 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 첫째, 내수시장 진출 목적으로 한중 FTA를 현재의 비교우위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교우위 전망을 통한 동태적인 협상전략을 마련

○ 둘째, 중국의 중고위 분야의 기술추격과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의 경쟁격차에 대비하여 R&D 투자 확대

○ 셋째, 중국의 지역별, 산업별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를 확보

□ 다만, 향후 정부의 경제구조개혁과 단기적 위험간의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개혁 강화로 인한 다방면의 정책적 리스크가 단기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

○ 중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리스크들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위험의 타부분 전이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표 4> 경제개혁을 위한 장기 과제와 단기적 위험

경제개혁을 위한 장기 과제		단기적 위험
정책내용	목적	부작용
반(反) 부패	공평, 사회안정	소비 위축, 성장 둔화
그림자 금융억제	금융산업 개혁 및 발전	중소 민영기업 도산, 실물경제 악화
임금인상	소비 촉진, 빈부격차 해소	기업환경 악화
부동산 가격 억제	민생안정, 부동산 시장 거품 제거	지방정부 채무 악화
호구제 개혁	계층 간 격차 해소	기존 대도시 실업 증가
국유기업 개혁	경쟁력 강화	실업 증가 및 사회혼란